



코로나19와 중일관계의 현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본 방문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었다. 6월 9일의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베 수상은 “현재는 구체적인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의 방일을 통해) 양국이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표명하는 기회로 하고 싶다는 의사를 중국 측에 전달했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시진핑의 방일은 당분간 계획에 없다는 말이다.

지나해 말 공식적인 일정에 오른 시진핑의 방일은, 계획대로 실행이 되었다면 중국의 국가주석으로서 2008년의 후진타오 이후 12년 만의 국빈 방문이 될 터였다. 실현 직전에 이 중요 이벤트를 연기시킨 주범은 물론 코로나 위기이다. 일정 연기가 확정된 3월 초에는 양국 정부 모두 코로나 확산 방지에 부심하고 있었고, 특히 최초 감염자가 발생한 도시 전체를 봉쇄해 버린 국가의 리더가 여전히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유에 나서는 것은 국내정치적인 위화감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일본 정부에게 시진핑 주석의 방일 연기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중일관계를 안정된 기반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호기가 사라진 것을 의미했다. 양국 요인의 상호 방문과 군사당국의 교류 재개로 조성된 중일관계 개선의 흐름이 예상치 못한 코로나 위기에 막혀 버린 것이다. 물론 아베가 언급한 대로 상황이 허락한다면 방일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은 이미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다. 홍콩의 국가보안법문제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옹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자민당 외교부회는 7월 초 시진핑 주석의 방일 취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아베 내각의 구심력 약화와 함께 일시적 일정 변경이 무기한 연기로 굳어질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잠시 시계를 코로나 위기 발생 이전으로 돌려 보자. 시진핑의 방일은 일본 외교 특히 아베 정부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얼마나 중요한 이벤트였을까. 단적으로 말해, 시진핑의 방일을 통해 아베 정부가 실현하고자 했던 것은 중일관계의 현재를 재정의하는 것, 즉 중일관계의 ‘리셋’이었다.

부상하는 중국과의 관계를 운용하는 것은 어떤 국가에게도 쉽지 않은 과제이다. 여전히 커지고 있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의도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국제관계의 본질상 상대국 의도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즉 더 커지고 세진 중국이 딴 생각을 하기 전에 양국관계의 현재(the status quo)를 못 박아 둘 필요가 있다. 중국의 행동이 변했을 때 명확히 책임을 묻고 원상 복귀를 요구하기 위함이다. 문제는, 그 현재가 어디에 있는지 양국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2012년 12월에 출범한 아베 내각이 추구한 중국정책의 핵심 과제는 중일관계의 현재에 대한 중국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일, 그리고 그에 기반하여 중일관계의 기반을 재구축하는 일이었다. 배경에 있던 것은, 같은 해 9월 당시의 민주당 정권이 발표한 센카쿠 국유화 결정과 중국 정부의 강력한 반발, 그리고 중국 전역을 휩쓴 반일데모로 나락에 빠진 '전후 최악'의 중일관계였다.

미일관계와 중일관계의 양면에서 치명적인 외교력 부재를 노정한 민주당 정권의 패퇴 후 재등장한 아베의 움직임은 신속하였다. 센카쿠 국유화 이후 정기화된 중국 공선의 '영토 침범'에 대한 입장과 정책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중일관계의 원상복귀를 위한 교섭이 본격화되었다. 다행히 아베에게 있어 중일관계를 복귀시켜야 할 지점은 명확하였다. 2006년 10월, 일본 수상으로서 5년 만의 방중을 실현한 아베 자신이 제시한 "전략적 호혜관계"가 그것이다. 당시 중일관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동중국해 가스전 공동개발의 교섭과정에서 등장한 전략적 호혜관계는 중일관계의 재구축을 핵심 요소로 하는 아베의 대중외교의 키워드가 된다.

실제로 이후의 중일관계는, 전략적 호혜관계의 '원점'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동의를 끌어내는 데 아베 정부가 일정 부분 성공하였음을 보여 준다. 중일관계 개선의 출발점으로 평가되는 2014년 11월의 첫 정상회담에서 아베는 "중일관계에 대한 나의 견해는 2006년 10월의 방중시로부터 전혀 변하지 않았고 지금이야말로 전략적 호혜관계의 원점으로 돌아가 양국관계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진핑은 4개의 기본 문서, 즉 1972년의 중일공동성명, 1978년의 평화우호조약, 1998년의 중일공동선언, 그리고 2008년의 전략적 호혜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에 입각하여 중일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 그리고 전략적 호혜관계를 실질화하는 방안으로 2018년 10월, 아베수상의 방중에 맞추어 양국 간의 제3국에서의 인프라 공동개발 및 경제협력안이 발표되었다.

물론, 아베정권기의 중일관계의 진전을 과연 어디까지 전략적 호혜관계에 기반한 관계 재구축의 귀결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존재한다. 중국 정부의 관점에서 볼 때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최근의 경제성장률 둔화로 인한 (특히 지방정부로부터의) 투자 및 기술협력의 요구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시진핑의 관점에서는 자신의 핵심 대외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에 대한 일본의 지지 표명이 관계 개선의 중대한 요인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결정적으로 트럼프 정권 수립 이후의 전략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면, 중국의 대일협력은 미중관계의 악화로 인한 "전술적 휴전"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적' 요인의 영향은 중일관계의 현재를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중국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여전히 대중외교의 핵심 과제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중요성을 오히려 부각시키고 있다. 실제로 시진핑 방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최대의 화두로 등장한 “제5의 기본문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급변하는 전략환경 속에서 중일관계의 현재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곤란한 작업인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지난 1월 일본 외무성은, 중국 시안에서 열린 차관급 회의에서 새로운 기본 문서의 작성이 합의되었다는 언론보도를 강력히 부정하면서 해당 문서의 작성이 시진핑 방일의 전제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배후에 있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앞서 말한 2008년의 전략적 호혜관계의 공동선언이 중일관계에 대해 일본이 상정할 수 있는 ‘최선의 현재’를 담고 있다는 일본정부 내의 시각이다. 즉 새로운 문서가 담게 될 중일관계의 현재가 이전의 그것보다 후퇴하게 된다면 굳이 작성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흔네’에는 2012년 이후의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영토 갈등의 현실을 중일관계의 현재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경제력의 격차가 3배에 가까워진 2020년의 중일관계를 대등적 관계성에 기반한 2008년의 언어로 규정하는 것은 의도된 오인에 불과하며 실질적 협력의 가능성을 저해 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코로나 위기가 향후 신속히 진정될 것을 가정한다면 시진핑 방일의 논의가 예상보다 빨리 재개될 가능성도 물론 존재한다. 무엇보다 지난 8년간의 대중정책의 목표와 성과를 고려해 볼 때, 10년에 한 번 있는 중요 이벤트를 자신의 (유일한) 외교적 유산으로 남기고 싶은 아베 수상의 개인적 선호가 강력히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 외교의 관점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더 커진 중국이 다른 생각을 하기 전에, 나아가 미중 관계가 결정적 충돌에 이르기 전에, 최대한의 정책 선택의 여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중일관계의 현재를 규정하는 일이다. 중국의 국가주석을 불러 놓고 ‘벚꽃 구경’만 하기에는 상황은 너무 긴박하고 시간은 촉박하다.



임재환

아오야마가쿠인대학 국제정치경제학부

“

〈관정일본리뷰〉는 일본이슈 및 한일현안에 대한 전문가 칼럼을 발신하고, 미래지향적인 소통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서울대일본연구소가 기획하고 관정이중환교육재단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

※ 필진의 글은 일본연구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